

# ‘채상병 특검’ 28일 재투표… 여야 신경전 고조

민주, 與 낙선·낙천 58명 설득작업  
17표 이탈자 나오면 특검법 통과

국힘, 부결 관측 속 표 단속 총력  
무기명 투표·본회의 불참 등 변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낙선자와 낙천자를 대상으로 가결을 위해 설득 작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권(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충남 예산군 스포러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속 1석)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회의장이 투표하지 않으면 18표가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으로 7~8명을 접촉해 설득 작업 중이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

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전도 발송했다.

그는 생선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남긴 편지를 첨부해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4·10 총선에서 낙선, 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여당 의원은 58명이다.

무기명으로 재의 표결이 이뤄지는 점도

변수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전’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21일엔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과 시민사회와 공조해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순직사건(수사)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표 단속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선·낙천자 등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당내에선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

고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기명 투표의 변수가 여전한 데다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기동·김웅 의원 등 3명이다.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낙선했다.

여당 낙선·낙천자의 표가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마지막까지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전남도, 국회·도의회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제안

### 김 지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도가 국회, 전남도의회에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의회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도민은 물론 국회, 도의회, 각계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공동세미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는 인구 180만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내 총생산) 88조원 중 21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명칭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로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모든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 도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보려 해도 많이 막힌다”며 단적인 예로 출생수당과 해상풍력, 허가권 제한을 들었다.

도와 시·군이 신생아에 대해 만18세가 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씩을 지급하는 318출생수당에 대해선 “복지부 사회복지협의를 통과해야 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추세에 한 기당 15MW까지 대형화됐음에도 도지사 허가권은 3MW에 불과해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특자도를 통해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 “원칙·상식… 노무현 정신 계승”

### 오늘 서거 15주기 추모

광주시의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그가 지향했던 지역 균형발전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들은 22일 “노 전 대통령은 한 평생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며 “좋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고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

다 보니 국민들은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매순간 민생을 돌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과 가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 ‘전남 의대 신설 문제’ 도의회 도정질의서 공방

### 정원 미포함·공모 공감대 부족 지적 김 지사 “배정 노력·소통 강화할 것”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올해 첫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정부 추천대학 공모 방식을 둘러싼 공방과 예비배정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일부 쟁점에서는 입장차도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은 22일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지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것은 시의적절했지만, 그 자리에서 (전남 국립 의대) ‘200명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어야 이후 진행될 도의 계획에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번의 변곡점을 예로 들었다.

하나는 3월20일, 또 다른 하나는 4월 19일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한지 6일 뒤인 3월20일,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 의대 추진을 재확인한 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서울 0·경인 361·비수도권 1639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남 의대 200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의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의지는 확인되지만, 이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이미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지만, 전남 몫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도지사는 4월2일 돌연 공모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9일이 또 다른 변곡점인데, 총리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모집을 허용하고, 대교협은 이를 바탕으로 5월2일 1469~1509명으로 발표했다”며 “사실상 2025년 배정은 마무리됐고, 2026년도부터는 당초 교육부 안대로 간다고 볼 때 ‘2000+알파’여서 전남 입장에선 지금보다 몇 십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30일, 대교협의 대입요강

최종 발표를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한 뒤 “적어도 예비배정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당초 2000명에서 여유 정원 450명이 생긴 만큼 전남 몫으로 ‘2026학년도 150~200명’을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지만 5월이 끝이 아닌 만큼, 공정한 공모에 의한 대학추천을 통해 정부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설의 대 정원 배정이 꼭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현(민주당·담양2) 의원은 “통합 의대에서 단일 의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미흡한 공론화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방식은 대학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신속한 추진도 쉽지 않아 공모 방식을 통한 추천이 최적이라고 판단했고, 공모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퇴임 앞둔 김진표 “선거제 폐해 심화, 개헌 필요”

###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뤄졌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고 한결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이용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다.

김 의장은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전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